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 확대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회적 합의

서남규·이상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재정책층에 한계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의료보장에서의 우선순위를 정해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는데, 후자는 한정된 재정을 최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의료재정 집행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문화적, 사회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각 국가 내부에서도 계층이나 집단에 따라 상이한 인식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떠한 항목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키거나 보장비율을 높일 것인지, 또는 어떤 대상(연령별, 소득계층별, 장애등급 등)의 보장을 늘린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우선순위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고, 사안마다 필요에 따라 보건복지부나 전문가그룹 의견만을 반영한 채 결정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의료영역에서 한정된 자원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우선순위 기준이 지닌 정치철학적인 의미를 탐색하여 의료공급자, 국민, 보험자(공단, 복지부, 심평원), 관련 전문가들이 스스로의 철학적 입장과 선호하는 우선순위 기준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조사 결과를 통해 각 집단이나 계층들의 입장을 확인한 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 각 입장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들의 회의를 통해 합의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맞는 의료재정 할당의 우선순위 결정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의료재정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재정원의 활용을 둘러싼 첨예한 이해관계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국민적 수용성이 보다 높은 의료보장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